

# 국회, 본회의 개의...내년 예산 원안 상정

### 정부제안 설명 후 산회...“수정안 상정해 표결”

### 예결위 활동시한 종료됨 따라 자동부의 상태

국회는 3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자동부의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원안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예산안 원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부의 상태였다. 부의는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문 의장은 상정에 앞서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어제(12월 2일)였는데, 어제가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준수를 위해선 오늘(본회의를) 해야 한다”며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예산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 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이어 “국민들께는 법정시한 내 처리를 하지 못한 것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를 독려하기 위해 예산안 상정과 (정부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안 설명 후 산회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장, 이경호 운영위원장,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 서동욱 운영위원장이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2019년도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즉각적인 국비 예산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 “경전선 호남 구간 전철화 예산 145억 반영하라”

### 광주시·전남도의회 국회서 기자회견...“국토 균형발전 기틀 마련 차원”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3일 경전선 호남 구간(광주~순천)의 전철화 사업 예산을 국비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장과 이경호 운영위원장,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과 서동욱 운영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구하는 촉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경전선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유일한 철도 교통망으로, 노선 중 영남 지역은 복선 전철화 사업이 이미 완공되거나 진행중이지만, 호남 구간은 일제 강점기 이후 단 한 번도 개량되지 않았다”며 “호남 낙후의 상징이며, 영·호남 차별의 대표 사례로 지적돼왔다”고 밝혔다. 이어 “4년 9개월이나 끌어온 예비타당성조사 0.85라는 높은 B/C에도

불구하고 0.01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명백한 지역 차별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광주~순천 구간의 경전선 고속화 사업이 실현되면 모든 구간이 시속 200km 이상 고속운행이 가능해지면서 영·호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토 균형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

다”며 “정부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45억원을 즉각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경전선 순천~광양 구간은 2012년 이미 복선 전철화 됐고 광양~진주 구간은 2016년 복선화가 됐다. 삼랑진~진주 구간은 2013년 복선 전철화가 완료됐다. 하지만 광주~순천 구간(116.5km)은 1930년 일제강점기 건설 이후 유일하게 그대로 남아 낙후 철도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서울=강병은 기자

## “전국 1위도, 꼴찌권도 모두 전남”

### 서울대 연구팀 개발 건강지수 지역 편차 커 고흥군 상위 1위, 목포시는 하위 4위 차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국민건강지수’에서 광주는 광역시 중 중간 정도 수준을, 전남은 광역도 중 상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고흥군이 1위에 오르고, 10위권 안에 전남 지역이 4곳이나 포함되는 등 우수한 건강지표를 보였다. 하지만 목포시가 0.469로 전국 최하권에 머무르기도 하는 등 광주 전남 권역 안에서 건강지표가 큰 편차를 보였다. 국민건강지수는 서울대 경제학부 연구팀(홍석철·윤양근·유지수)이 건강보험공단, 통계청, 질병관리본부, 삶의 질 확회 등에서 각기 집계하는 국민건강 지표들을 통합해 국내 처음으로 개발한 개념이다. 기존 지표들이 국민건강의 단면만을 측정했다면, 국민건강지수는 이 분야 전문가 15명과 함께 지수 산정을 위한 가중치를 선별하고, 최종적으로 10개 영역, 29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특징이다. 3일 국민건강지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광주시의 국민건강지수는 0.543, 전남도의 국민건강지수는 0.551을 기록했다. 광역시 중 울산(0.581)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0.567), 대전(0.561), 대구(0.558) 다음으로 광주였다. 도 단위 광역단체 중에는 경북(0.558) 다음으로 전남이 높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는 10위권 안에 광주·전남 시군구가 3곳이나 포함됐다. 고흥군이 0.61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국민건강지수를 기록했으며 보성·장성군, 광주 광산구는 0.593으로 공동 8위였다. 0.550 이상의 비교적 양호한 국민건강지수를 보인 전국 시군구 77곳 중 광주·전남 시군구는 모두 12곳이 포함됐다. 반면 목포시는 0.469로 강원 평창군(0.459), 충북 괴산군(0.463), 경기

동두천(0.469)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0.510 이하의 전국 하위권 40곳 중에는 목포시를 포함해 나주시(0.505) 광주 동구(0.509) 등이 이름을 올렸다. 광주시 자치구의 국민건강지수 순위는 광산구가(0.593)로 가장 높았고, 남구(0.553) 서구(0.545) 북구(0.514) 동구(0.509) 순이다. 전남도 시군구의 국민건강지수 순위는 고흥·보성·장성군에 이어 광양시(0.588) 화순군(0.579) 강진군(0.571) 순천시(0.568) 무안군(0.561) 담양군(0.556) 순이다. 연구팀은 최근 들어 의료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의료보장성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국민건강지수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점을 확인한 데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를 주도한 홍석철 교수는 “우리나라 보건 의료 분야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지수와 정부·지자체의 보건 의료 지출 및 보건 의료 인력 배치를 결합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핵심 요인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시민참여예산제 취지 퇴색” 이경호 시의원, 검토 필요

광주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시민참여예산 가운데 동일인이 제안한 여러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시민참여예산제 도입 취지가 퇴색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경호 의원(교육문화위원회, 북구2)은 3일 열린 문화관광체육실 2019년 본예산 심의에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시민참여예산 6건 가운데 특정인이 제안한 2건이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2019년 문화관광체육실 시민참여예산은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 확대 구축 등 총 6건에 20억2,0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의원은 “청년문화의 집 시범사업은 청년센터 등 기존의 청년공간과 차별성이 없으며 문화예술행사 사회적 일자리 사업 역시 기존 청년문화일자리 지원 사업 등과 중복되는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에 관한 사업의 필요성, 수혜대상, 기존 사업과 중복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시민참여예산제가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 실현 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애란 기자

## 정치 브리핑

### “쌍둥이 낳으면 출산휴가 기간 늘린다”

#### 주승용 의원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주승용 국회 부의장(여수 을)은 3일, 둘 이상의 아이를 동시에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기간을 늘리고, 남편의 경우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내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남편의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주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14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으로 연장했다. 더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다태아 가정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 번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다태아 가정과 일반 정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5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중 핀란드와 영국은 각각 18일, 14일 등 2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주승용 부의장은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다태아 임신부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정에 충분한 휴식과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은 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경진 의원 “한부모 이혼 가정에 도움”

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 북갑)의원은 3일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족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구의 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을 통해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해주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중이전소득 항목에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채권자가 지급받는 ‘양육비’가 포함된다.



문제는 양육비 채권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김경진 의원은 “양육비를 이전소득에서 제외하는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양육비 미지급 해결, 양육비 이행확보 서비스 신청의 활성화 등을 통해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족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은 기자

### 지역 콘텐츠산업 전략 모색 토론회

#### 최경환 의원 “지역 콘텐츠·관광 활성화 기대”

민주평화당 최경환(광주 북을)의원은 지역콘텐츠산업 발전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3일 최 의원에 따르면 4일에는 ‘지역콘텐츠산업 전략 모색 토론회’를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개최하고, 10일에는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세미나’를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현장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전남도의 담당 실국장, 협회와 해당 기업대표, 전문연구 교수 등이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갖는다. 4일에 개최되는 ‘지역콘텐츠산업 전략 모색 토론회’에는 전남대 주정민 교



수(한국방송학회)가 지역분권시대 지역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제하고 전주대 한동승 교수와 김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정부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콘텐츠산업과 지역관광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개선과 재정배분 등 대안을 만들어 지방도 서울 등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큰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연속해서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은 기자

### 여성이 행복한 복지 농촌 만들기 토론회

#### 서삼석 의원 “여성도 동등한 혜택 누려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의원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여성이 행복한 복지 농촌 만들기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박완주, 오영훈, 윤준호 의원과 농업진흥청이 함께 주최하고, 여성농업인단체, 대학, 연구기관,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농촌여성의 복지증진과 지위향상 연구동향 및 과제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와 여성농업인단체의 활성화 등의 주제 발표를 통하여 여성농업인이 처한 현실을 진단해 보고



향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방향 등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농어업도 전문경영이라고 본다면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직장 여성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문화 복지에 대한 동등한 혜택을 반드시 받아야 되며 출산 휴가제도와 출산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 미래 농촌을 짊어지고 갈 젊은 여성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포함한 중장기 연구로 드림을 마련해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방향을 설정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은 기자